

다산포럼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죄악



김동준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국은 국내정치 보다는 외교·안보 정책 실패로 국가와 국민의 운명이 나락으로 떨어진 예가 한 두 번이 아니다. 외교·안보는 국가의 근본과 맞닿아 있고, 집권 세력이 공익과 국민의 편에 서 있지 않아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그 피해는 한두 세대를 넘어 지속된다. 지난 한 세대 동안 일제 식민지 40년의 노예화와 소모적 분단 대결 구조는 모두 조선 말기 세도정치의 귀결이었다.

그런데 외교·안보·국방의 무대책, 사실상 국가 부재가 몇 달째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도 사드 배치는 미국의 뜻대로 일정에 들어갔고, 중국은 경제 보복을 시작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경제 제재로 북한 핵을 막지 못했다는 평가 위에서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까지 검토한다고 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으로 북한을 타격하면, 북이 남한에 대응 공격을 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계속 범미를 주고 한국이 주변 강대국의 군사전략 경쟁에 '노'(No)라고 말하지 못하면, 미·중의 패권 다툼의 틈바구니에서 한반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참으로 비참한 신세가 될 것이다.

많이 본 장면 아닌가? 임진왜란, 병자호란, 청일전쟁, 태평양전쟁, 한국전쟁. 이 모든 전쟁에서 한국은 주체도 아닌 처지였지만, 수십만에서 수백만을 헤아리는 한국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었고, 수많은 청년들이 징집되어 사망했으며, 수만 명의 여성이 성폭력에 노출되었고, 온 한반도가 수십 년 동안 울음바다가 되었다.

특히 지금은 주변 강대국 패권이 이동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선 인조 때의 병자호란과 조선 말 청일전쟁 시기와 너무나 유사하다. 지금 사드는 고도 미사일이나 수도권 방어에는 거의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이 너무 분명하게 드러났고, 미국의 오랜 국방 전략의 산물도 아니며, 특히 마틴이라는 일개 군산복합체의 로비로 배치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국인의 생명을 지켜주지도 못하는 미국의

전략에 왜 한국인들이 총알받이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아직 모든 면에서 미국의 맞수가 되지 못하는 중국보다는 미국에 기대야 한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지배적 생각이다. 어느 정도 인정한다. 그러나 그 때문에 위안부 협상도 졸속으로 처리하고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맺어 일본이 한반도에 들어올 명분도 만들어 주었다. 국민의 자존심이 크게 망가졌다. 과연 우리가 사드를 받아들이면 '국익 제일주의' 트럼프가 한국을 '예쁘게' 봐줄까? 또 대체 한국은 이것을 양보하고 무엇을 얻었을까?

칸트가 '영구평화론'을 설파한 까닭은 국가 간에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한 평화국의 수립은 요원하며, 한 국가 내에서 법의 지배나 신뢰가 형성되기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남북한의 준전쟁 상태는 막대한 군비 지출뿐만 아니라, 한국이 국민주권이 보장되는 민주주의의 복지국가가 되는 데도 결정적인 걸림돌이다. 생존의 위기에 처한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돌볼 여유가 없다.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유는 죄 없는 국민들이 전쟁터의 불조시계가 되기 때문만이 아니라, 지금 박근혜 정부처럼 안보 위협을 빌미로 극히

부패하고 부도덕한 세력이 계속 득세하기 때문이다.

조선 인조 시대의 쿠데타 세력이 그러했듯이 권력의 정당성이 약한 세력일수록 강대국에 빌붙고 그들의 요구에 끌려다닌다. 그들은 전쟁 위기를 오직 권력 강화의 명분으로만 이용한다. 국가 주권을 상실해도 그것에 대해 항의할 힘도 없고, 그럴 의지도 없다. 조선 말기 고종과 수구세력에게 성가신 시어머니 청나라나 교활한 일본보다 국내의 동학군이 더 원수였던 것처럼. 현 박근혜 정부나 외교·국방 엘리트들에게는 국가의 위세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보다 정치적 반대 세력이나 촛불시민이 더 두려운 것 같다.

사드 배치, 우리가 '노' 하면 그만이고 한미동맹이 깨어지는 것도 아니다. 한국 정부는 중국의 경제 보복 위협을 명분으로 미국에게 공을 넘겨야 한다. 그런데 이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한국 정도의 국력이면 얼마든지 미·중과 협상을 할 수 있다. 자기가 쓸 수 있는 카드를 스스로 포기하는 정부에게 주변 강대국이 신경이나 쓸까? 박근혜 정부의 죄과는 이번 게이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지난 4년 동안의 국익 포기에도 있다.

NGO 칼럼

생명존중은 인식전환에서부터



장석
광주생명전화 소장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꾸어 나아가는 곳이 광주 생명의 전화이다. 24시간 생명 지킴이 역할을 하는 공간이다. 광주 시민 누구나 시민상담교육을 받으면 전화상담봉사로 활동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광주 생명의 전화에는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전화상담 봉사자들이 있다.

최근 속 마음을 이야기할 곳 없어 우울해지는 이웃, 삶의 무게를 벗어나지 못해 힘들어하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다. 청년 실업과 실직, 사업실패, 경제적 어려움들

겪는 이들, 학교폭력, 극심한 경쟁적 교육 풍토에 적응 못 하고 삶을 포기하는 학생들도 있다. 가정해체로 인한 고독사, 그리고 초고령화 사회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무력해진 수많은 노인들이 삶에 회의를 느끼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있다.

더구나 사회적으로 곤경에 처할 때마다 터져 나오는 지도층 인사들과 유명 연예인들의 자살 행렬은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적으로 자살자 수가 매년 100만 명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보고를 내놓았다. 지난 2003년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WHO(세계보건기구)와 IASP(국제자살예방협회)는 매년 9월10일을 '세계자살예방의 날'로 정하고 자살과의 사투(死鬪)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최근 10년간 급속히 증가하여 2010년 한 해 동안 무려 1만5566명이 자살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짓게 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31명,

매일 42명이 생명을 끊고 있다. 주요 선진국 중 영국은 인구 10만 명당 5.8명, 미국은 10.3명, 일본은 19.4명으로 우리나라는 이들 나라에 비해 최대 5배까지 높다.

더 슬픈 일은 자살이 우리나라 사망원인 중 4번째에 해당하고 그 중에서도 미래를 담당할 10, 20, 30대 청장년층의 사망원인 중 1위가 자살이라는 점이다. 자살은 한 국가와 사회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을 나타내는 척도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높은 것은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살기가 힘들다는 방증이다.

자살은 개인적인 행위이지만 결과는 사회적인 현상으로 나타난다. 자살은 가족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무거운 죄책감과 고통을 안겨준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정신적인 충격과 다른 사람들에게 자살을 유발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자살은 엄청난 사회경제적인 부담뿐 아니라 생명존중의 가치관을 흐리게 하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혼란하게 하여 사회적 안정을 저해한다.

자살을 인권의 문제로 바라보고 자신

의 생명에 대한 폭력이 정당화할 수 없다는 가치관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은 함부로 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이라는 천부인권사상(天賦人權思想)을 지켜야 할 것이다.

자살위기에 처한 사람들은 가족이나 친구 이웃에게 언어적·행동적으로 자살의 경고신호를 보낸다. 광주생명전화는 광주시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대학병원, 학교, 등이 긴밀한 네트워크를 갖추고 자살위험에 처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생명의 전화는 전화상담뿐만 아니라, 청소년 생명존중 프로그램을 초등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매년 교육하며 생명경시 문화에서 존중문화로 바뀌가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오직 생명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라는 말씀이 있다. 이 아홉 가지 열매 중 분노조절, 감정조절을 위한 절제의 미덕을 강조하고 싶다.

기고

4차 산업혁명과 변해가는 광주의 산업지형



문정찬
광주시 미래산업정책관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이다. 대선주자의 공약이나 미래산업 예측에 관한 토론회, 각종 경제전망 등에서도 4차 산업혁명은 늘 우선순위로 언급된다.

하지만 수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개념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일은 결코 녹록지 않아 보인다.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인 알파고(Alpha-Go)나 모바일 게임으로 출시된 포켓몬고(Pokémon-Go)를 통해 인공지능과 증강현실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는 있지만, 이들이 현실세계에 투영된다는 것이 쉽게 상상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단 하나 확실한 것은 개념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4차 산업혁명'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스마트 팩토리'와 'ICT·SW 융복합 및 산업 고도화' 정책이 그 핵심이다.

먼저, 중소기업의 제조공정 혁신 측면이다. 정부에서는 '스마트 공장'을 통해 제조 전 과정에 ICT 기술을 결합해 생산성을 강화하고 제품 불량률을 감소하는 등의 생산시스템 최적화 맞춤형 공장 확산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

시에서도 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함께 102개 기업에 대한 '스마트 팩토리 구축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컨설팅, ICT 장비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에도 40여개 공장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인데, 스마트 공장은 기존 공장에 비해 생산성이 300% 수준까지 개선되고 재무적 효과도 총 50여억원에 달하는 등 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경영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선 공약 등과 연계하여 '스마트 공장 팩테크 플랫폼 구축', '금형 스

마트 팩토리 실증단지 조성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공장 설계 단계부터 ICT 센서 기반과 생산공정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이 전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스마트 공장이 확산되면 생산설비, 생산, 품질, 물류 등 제조과정 전반에 자동화 및 실시간 컨트롤이 가능해지며, 다품종 소량 맞춤형의 유연한 생산체계가 구축된다. 또한, 완벽한 품질 관리가 가능하게 되어 독일 등의 제조 강국과의 기술 격차를 좁힐 수 있는 획기적인 기회가 된다.

다음으로는 '산업간 융·복합을 통한 기존 산업 고도화' 측면이다. 광주시에서는 친환경 자동차, 에너지 신산업, 광·의료 융합, ICT·SW 산업을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하여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

친환경 자동차 분야는 친환경자동차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통해 자동차 부품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또한, 수소전기차 융합 스테이션을 활용하여 에너지 분야와의 연계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초경량 고강성 차체 기

술개발, 자동차 센서 모듈 기술개발 등으로 미래형 자동차 산업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다.

에너지 신산업 분야는 대선 공약과 연계하여 'Global Smart Energy City' 조성을 목표로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 에너지 산단 조성, 에너지 저장 및 변환 기술 개발, 직류전기(DC) 산업 육성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 외에도 광산업과 의료 산업을 융·복합하여 '광 기술을 활용한 진단 및 치료' 분야를 새롭게 개척해 나가고 있으며, S/W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 등은 산업 융·복합의 핵심이 되는 ICT, SW 산업 육성의 기반이 된다.

또한, '2017 디자인비엔날레'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함에 있어 디자인의 역할을 고민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준비를 통해 광주는 세계적 저성장 시대 돌입과 글로벌 불확실성의 확대, 트럼프 보호주의 확대 등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자 한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변해가는 광주의 산업 지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社說

‘국정 농단’ 특검 수사 90일 그 성과와 과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어제 90일간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국정 농단’ 의혹 대부분에 대통령이 연관돼 있다고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 대통령에게는 불소추특권이 있는 만큼 관련 수사는 일단 검찰로 넘겨지게 된다.

먼저 특검은 최순실 씨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으로부터 430억 원의 뇌물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 박 대통령이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유라 씨 승마 지원과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도 삼성그룹 승계 등 현안을 해결해 주는 대 세력이나 촛불시민이 더 두려운 것 같다.

사드 배치, 우리가 ‘노’ 하면 그만이고 한미동맹이 깨어지는 것도 아니다. 한국 정부는 중국의 경제 보복 위협을 명분으로 미국에게 공을 넘겨야 한다. 그런데 이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한국 정도의 국력이면 얼마든지 미·중과 협상을 할 수 있다. 자기가 쓸 수 있는 카드를 스스로 포기하는 정부에게 주변 강대국이 신경이나 쓸까? 박근혜 정부의 죄과는 이번 게이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지난 4년 동안의 국익 포기에도 있다.

실을 확인했으나 대통령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데다 청와대 압수 수색도 불발된 만큼 대통령의 세월호 사고 당일 7시간의 행적은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번 특검팀의 수사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삼성 외 대기업 수사,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 등의 한계가 보인다. 하지만 ‘적폐 청산’이란 국민의 열망을 어느 정도 해소함으로써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최고 활약을 펼쳤다는 평가도 많다. 특검을 향한 국민의 응원은 열화하고 갈았다.

특검은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광대한 수사 범위에 비해 기간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여기에 기간 연장 승인을 임명권자에게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이면서 공소 유지를 위한 검사 등 공무원 파견 문제와 군사기밀을 이유로 압수 수색을 거부하는 경우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향후 특별법 제정 시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것이 다.

한 달에 책 한 권도 사 보지 않는 가정 많디나

우리나라 가구당 월 평균 도서 구입비가 역대 최저치인 1만5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통계청이 지난해 전국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도서 구입비 현황 결과다. 2016년 신간 단행본 정가 1만8108원인 것을 감안하면, 한 가정에서 한 달에 책 한 권도 사 보지 않았다는 얘기다. 책을 읽지 않는 문화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 정도로 심각하다니 씁쓸하기 짝이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인 이상 가구는 도서 구입에 1만5335원을 지출했다. 이는 전년도 1만6623원보다 7.7% 줄어든 금액이다. 2012년 처음으로 2만 원 아래로 떨어진 이후, 지난해에는 1만5천 원대로 내려앉았다.

책 구매 지출액은 소득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지난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는 4698원, 상위 20%인 5분위 가구는 2만6928원을 썼는데 이는

전년인 2015년의 5.2배보다 더 벌어진 수치다.

이처럼 사람들이 책 구입에 돈을 쓰지 않는 것은 소득 감소 때문이다. 하지만 책을 읽지 않는 풍조의 만연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문체부의 2015년 조사에 의하면 1년간 책을 한 권이라도 읽은 성인의 비율이 65.3%에 그쳤다. 최근 디지털문화에 밀려 책을 기피하는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다. 청소년의 경우 독서보다는 스마트폰이나 게임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책을 읽지 않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고 했다. 검증된 지식과 정보의 원천인 책을 통해서 우리는 창의력을 기를 수 있다. 자녀들이 책을 읽게 하려면 부모들이 먼저 책을 가까이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아울러 정부 차원에서도 책 읽는 사회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1990년대 중반, 중국이 백두산 서쪽 능선을 개방했을 때의 일이다. 서쪽 능선은 일명 서파(西坡)라고 부른다. 당시 '민족의 성지'라는 의미답게 산행에 많은 기대를 가졌다. 천지를 오른쪽에 끼고 한상적인 코스였다. 마침 5월 말, 그곳은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되는 때라 참꽃이라든지 키 작은 야생화들이 지천으로 피어 있었다. 그야말로 감상주의 시구대로 '사뿐히 드러 밝고' 가야 되는 꽃길 트레킹이었다.

산 아래 모두막 속 소에서 하루를 묵었다. 이른날 새벽 일출을 보기 위해 일찍잠지 출발했다. 하지만 예상보다 이른 지점에서 길이 끊겨 버스 이동이 어려웠다. 일행은 배낭을 챙겨 바삐 걸었다. 해가 뜬 사이 간이 임박했다. 눈앞에 보이는 푸른 능선이 오르면 다시 능선이 또 있었다.

몇 차례 그런 낭패를 맞본 후야야 천지가 내려다보이는 능선에 올라섰다. 이미 해는 뒀다. 강렬한 햇살이었다. 천지와 어우러진 감격스러운 일출이었다. 조선족 가이드는 일년 365일 중 일출을 볼 수 있는 날은 며칠 되지 않기 때문에 '천운(天運)이라고 했다.

그동안 지리산 천왕봉은 수차례 가

봤지만 제대로 된 일출을 보지 못했다. 장터목 산장에서 감감한 새벽에 출발해 손발이 꽁꽁 얼어붙는 추위 속에서 해 뜨기를 기다렸다. 그렇지만 대부분 길은 안개와 구름 탓에 해돋이를 보지 못했다. 모두들 입을 모아 말했다. "3대(代)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

사진작가들은 바다에서 쫓는 오메가 일출을 최고로 친다. 지글거리는 붉은 태양이 솟아오르며 바다를 끌어올리듯 오메가(∞)형상을 만드는 것이다. 바다 안개 때문에 역시 보기 드문 현상이다.

문화재청이 일출 풍경이 아름다운 국가지정 문화재인 명승(名勝) 자원조사를 실시했다. 지리산 천왕봉과 전북 익산 옥정호, 덕유산 향적봉, 여수 무술목, 신안 가거도 등지를 대상으로 했다. 조사단은 지리산 천왕봉 일출에 대해 "알도적인 장엄미가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산정 조망지"로 평가했다.

해돋이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상징하기도 한다. 한반도 재남세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내일은 새로운 '태양'이 뜨길 바라는 마음이야 우리 모두 같은 것이다. /송기동 문화2부장 song@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8005)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지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